

광주 도심 '마지막 노른자위'...마북동 탄약고 부지 283만㎡ 개발 나섰다



8일 오후 광주시 서구 마북동 옛 공군 탄약고 주변이 뿌연 안개에 둘러싸여 있다. 국방부는 오는 2016년 6월까지 탄약고 이전작업을 끝내고, 총 283만㎡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 구역도 해제할 계획이다.

/나경주기자 mjna@kwangju.co.kr

市, 2016년 이전 대비 개발계획 마련 시민 의견 수렴

광주시가 도심 속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옛 마북동 탄약고 부지 개발에 나선다.

시는 8일 서구 서창동사무소에서 옛 마북동 탄약고 부지 개발과 관련해 '난개발 방지와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주제로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번 개발계획 초안 마련 과정에서 사업시행방식 및 개발용도 등 전 분야에 걸쳐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지난 2012년부터 오는 2016년 6월까지 이전하기로 한 공군 탄약고는 1975년 서구 벽진동·마북

동 일대 36만6000㎡부지에 설치되면서 인근 215만5000㎡에 달하는 대규모 토지마저 군사시설로 묶여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여론이 빚발쳤다.

현재 총 283만㎡ 부지 대부분이 논, 밭, 임야 등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공군탄약고와 전남도 종축장 등 국·공유지는 전체 면적의 28.1%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인근 상무지구와 수완·신창·금호지구 등 주변 신도심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개발 잠재력이 높아졌음에도 엄격한 개발 규제 때문에 광주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에도 걸림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오는 2016년 6월 공군탄약고 이전 사업이 마무리되고, 같은 해 12월 말까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곧바로 개발에 착

■마북동 사업대상지 위치도



수할 계획이다.

시는 일단 해당 지역에 청소년테마파크와 교육문화콘텐츠 연구개발사업, 문화예술 관련 초·중·고·대학, 예술극장, 컨벤션, 대학병원(조선대학교병원 접촉 중) 등 교육 문화시설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의 개발 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기어코 풀겠다는 '수도권 규제' 박근혜 정부에 지방경제는 없나

“백지 상태에서 전면 검토”...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 반발

박근혜 정부가 MB정권 때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됐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사실상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광주·전남 등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매년 국내외 투자유치 실적에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까지 검토하면 “투자유치 정책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가 유치한 외국기업 투자유치(MOU) 실적은 11건(4580억원)으로, 전년도 24건(6588억원)에 비해 반 토막이 났다. 실투자 건수도 3건으로, 전년 5건보다 2건이나 줄었다.

국내기업 유치 실적도 전년(98건·6969억원)보다 32건이나 감소한 66건(3018억원)에 머물렀다. 줄어든 투자금액도 지난해 유치액인 3018억원보다 많은 3951억원이나 감소했다.

이 같은 투자유치 실적 급감은 서울 등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면 공통된 현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 위축과 자치단체 간 치열한 경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외국기업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 외자유치 전담팀을 만들고, 광주의 주력산업인 광산업과 자동차, 금형, 가전, 치과용품 업체들이 밀집한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 등 4개 지역에 직원 4명을 상주시키기로 했다. 시는 또 국내기업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발로 뛰는 유치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강조한 데 이어 정부 고위관계자도 8일 “수도권 규제 등 해묵은 과제도 당연히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유치 노력에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가 수도권 입지규제와 환경규제 등을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완화할 경우 투자 기업들이 접근성 등 입지조건이 뛰어난 수도권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제 부

채별로 전담팀을 구성해 기업투자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선별해 시급한 것 위주로 규제개선방안을 마련, 연초 업무보고에 담기로 한 상태다.

수도권 지역 규제 완화의 핵심은 공장 신·증설과 대학 이전 등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장증설을 막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 내 환경규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도 추진됐다가 보류된 정책으로, 당시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계획이 일시 정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과 균형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의 어려움을 알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진도 오류리 ‘보물섬’ 입증

2차 발굴...원삼국시대 경질무문토기·고려청자 등 409점 공개

수 천년 동안 바다에 잠들어 있던 ‘진도 오류리 해역 2차 발굴’ 유물이 공개됐다. 문화재청의 부실 관리로 인해 일부 유물이 은닉되는 등 ‘물길 뻥’ 뚫던 문화재들은 1500년을 넘는 역사와 그 이상의 학술 가치를 담고 있는 ‘바닷속 보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재청이 8일 공개한 ‘2013년 진도 오류리 해역 2차 발굴조사 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129일간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인근 해역에서 모두 409점의 유물을 발굴했다.

고려청자를 비롯, 원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시대의 유물이 망라됐다는 게 문화재청 설명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원삼국시대(AD 1세기) 유물로 추정되는 경질무문토기로, 국내에서 수증 발굴 조사가 시작된 1976년 이래 삼국시대 유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굴 토기는 향아리(호), 그릇(심발) 모양 등 2점이지만 당시 생



원삼국시대 경질무문토기.



고려청자 잔 받침.

활상은 물론, 당시 해상 무역의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가치가 대단한 것으로 문화재청은 의미를 부여했다.

265점의 고려 청자 발굴도 눈에 띈다. 1차 조사 발굴 때 아름다운 빛깔과 선으로 이목이 집중된 기린·오리형 향로뚜껑과 같은 ‘원양형’ 뚜껑이 새롭게 발견되는가 하면, 잔 받침 등 고급 청자도 적지 않아 오류리 해역의 문화적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문화재청은 또 고려시대 때 궁궐이나 대규모 사찰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청자기와’ 발굴 성과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유물에 새겨진 ‘南面四×元二’라는 명문

해석에 따라 제작 지역과 무역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문화재청 분석이다.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 활동을 가늠할 수 있는 송나라 동전 경우 원보(景祐元寶)와 가대통보(嘉泰通寶), 동서고금의 공통 관심사를 유추할 수 있는 상통문대경, 초화문경, 무문경 등 3점의 청동거울도 이번 발굴 성과물이다.

문화재청은 아울러 유물 중 이형도기(異形陶器)의 경우 울림통이 있다는 점에 주목, 복원에 성공했는데, 1493년 악학계범(樂學軌範)에서 기록만으로 존재하던 세요고(장고의 원형)로 추정하고 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LIRIKOS



응답하라
2014
드라마 속
'고아라 에센스'

수분.미백.탄력 하나도 빠짐없이 갖춰야 피부는 완벽해지니까

리 리 코스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

3가지 마린 플랑크톤 에너지가 완성한 밸런싱 케어-
마린 트리플 트리트먼트가 숨어있던
수분, 미백, 탄력의 피부 잠재력을 깨우다

